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

허재철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jcheo@kiep.go.kr, 044-414-1042)

이형근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044-414-1069)

이보람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044-414-1045)

김승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한종범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hanshin3131@kiep.go.kr, 044-414-1287)

차 례

1. 중의원 선거 결과
2. 이시바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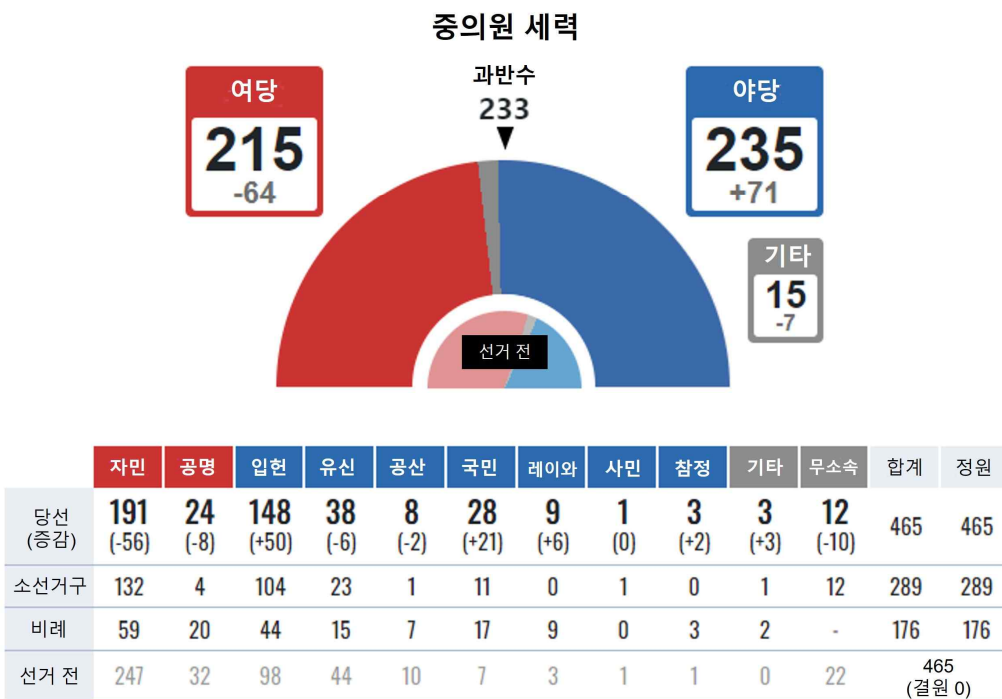
-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148석(+50)으로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민주당(7석→28석)은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r)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야당과 적극 협력하면서 취임 및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며,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과오를 반영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할 예정임.
 -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 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원전 적극 이용·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 추진도 예상됨.
 -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 향후 일본의 정국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 및 경제협력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전향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이시바 총리의 선출과 함께, 안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및 G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바,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중의원 선거 결과

가. 개요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대폭 감소하여 과반 확보에 실패함.
 - 집권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가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민당과 공명당(公明党)의 연립 정권에 의한 과반 확보도 실패함.
 - 자민당은 선거 이전의 247석에서 56석이 줄어든 191석으로, 공명당도 선거 전 32석에서 24석으로 줄었으며, 자·공 연립 정권의 의석수는 215석 과반인 233석에 미달함.
 - 선거 기간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자·공 연립 정권에 의한 과반 확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명확히 패배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야당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여 향후 정국 운영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입헌민주당은 선거 이전의 98석에서 50석이 증가한 148석을 확보하여 제1야당의 입지를 확고히 다짐.
 - 그 밖에 국민민주당(國民民主黨)이 7석→28석, 레이와신센구미(令和政権)가 3석→9석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 소수 야당의 의석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그림 1. 중의원 선거 결과 의회 세력 분포



자료: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이에 대한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¹⁾

나. 변화된 정치 환경 속 이시바 내각의 정책 방향

■ 자민당 총재 선거와 새로운 내각 구성, 그리고 이번 중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이시바 내각의 정책 운용이 전개될 전망이다.

- 지난 9월 2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당선된 후, 10월 1일 중의원과 참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신임 총리로 공식 선출되었으나,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정국은 선거 모드로 전환되었음.
 - 작년 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전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해 있던 상황에서 취임한 이시바 신임 총리는 통상적으로 정권 출범 초기에 지지율이 높은 현상(허니문 효과)을 이용하여 정국을 돌파하고자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자민당의 패배로 끝남.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정국 운영에서도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짐.
 -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제 및 민생 등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의하에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시바 총리는 10월 4일 실시한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국가안보, 민생, 경제발전, 지방 활성화, 청년 및 여성의 기회 보장 등과 관련한 소신을 밝히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납득과 공감을 얻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²⁾

- [국가안보]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외교력과 방위력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국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2025년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사이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현재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경제]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1) 「(社説) 自公過半数割れの審判・国民から首相への不信任だ」(2024. 10. 28.),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069400.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검색일: 2024. 10. 28.).

2) 「石破茂首相の所信表明演説【全文】」(2024. 10. 28.),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ASSB400RRSB4UTFK02FM.html>(검색일: 2024. 10. 25.).

- 일본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우주 등의 프런티어 개척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저축에서 투자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등 금융자본 시장의 변혁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녹색전환(GX)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대책, 능동적인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강조함.
- [민생]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실질임금 상승 실현과 각종 가계 지원을 약속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의료와 연금, 육아, 요양 등 사회보장 전반을 점검하고, 범죄 대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본’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함.
 - 특히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며, ‘어린이 미래전략(こども未来戦略)’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사회의 의식 개혁과 단시간 근무의 활용 등 근무 형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세계에서 자연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 방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신(장관)급 방재성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지방 활성화 및 기타] ‘지방이아달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함.
- 2025년 개최 예정인 ‘오사카·칸사이 엑스포’는 ‘세계와 교류하고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청년과 여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개혁 및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제도 개혁, 자살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 본인의 총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発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헌법심의회에 건설적 논의와 함께 국민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소신으로 취임 즉시 새로운 각료들을 임명하며 ‘납득(納得)과 공감(共感)’의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으나,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2명이 낙선하여 일부 교체가 예상됨.
- 마키하라 히데키(牧原秀樹) 법무상과 오자토 야스히로(小里泰弘) 농림수산상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토 다다히코(伊藤忠彦) 부총상은 선거구에서 낙선했지만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의원직을 유지함.

표 1. 이시바 내각의 각료 구성

| | | | | | |
|---|---|---|--|--|--|
| 총리 |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67) 중의원 12선 前 간사장 무파벌 | 총무상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村上誠一郎, 72) 중의원 12선 前 행정개혁담당장 무파벌 | 법무상* | 마키하라 히데키 (牧原秀樹, 53) 중의원 5선 무파벌 |
|  | |  | |  낙선 | |
| 외무상 | 이와야 다케시 (岩屋毅, 67) 중의원 9선 前 방위상 무파벌 | 재무상 |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68) 중의원 7선 前 후생노동상 모테기파 | 문부과학상* | 아베 도시코 (阿部俊子, 65) 중의원 6선 무파벌 |
|  | |  | |  | |
| 후생노동상* | 후쿠오카 다카마로 (福岡資麿, 51) 참의원 3선, 중의원 1선 무파벌 | 농림수산업상* | 오자토 야스히로 (小里泰弘, 66) 중의원 6선 前 총리보좌관 무파벌 | 경제산업상* | 무토 요지 (武藤容治, 68) 중의원 5선 前 경제산업부대신 아소파 |
|  | |  낙선 | |  | |
| 국토교통상** | 사이토 테쓰오 (齋藤鉄夫, 72) 중의원 10선 국토교통상 연임 공명당 | 환경상* | 아사오 게이이치로 (浅尾慶一郎, 60) 참의원 3선, 중의원 3선 아소파 | 방위상 | 나카타니 겐 (中谷元, 66) 중의원 11선 前 방위상 무파벌 |
|  | |  | |  | |
| 디지털상* | 다이라 마사아키 (平野明, 57) 중의원 6선 무파벌 | 부흥상* | 이토 다다히코 (伊藤忠彦, 60) 중의원 5선 니카이파 | 국가공안위원장* | 사카이 마나부 (坂井学, 59) 중의원 5선 前 내각관방부대신 무파벌 |
|  | |  | |  | |
| 저출산정책상* | 미하라 준코 (三原じゅんこ, 60) 참의원 3선 前 배우 겸 가수 무파벌 | 경제재생상* | 아카자와 료세이 (赤澤亮正, 63) 중의원 6선 무파벌 | 경제안보담당장* | 기우치 미노루 (城内実, 59) 중의원 6선 前 외무성 관료 前 모리아파 |
|  | |  | |  | |
| 지방창생담당장* | 이토 요시타카 (伊東良孝, 75) 중의원 5선 前 홋카이도 구서부시장 니카이파 | 관방장관** |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63) 중의원 1선, 참의원 5선 관방장관 연임 前 기사파 | | |
|  | |  | | | |

주: *는 처음 입각, **는 연임, 음영은 총리 및 주요 경제정책 담당 대신을 의미함.
자료: 『日テレNEWS NNN』의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 작성.

2. 이시바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 방향

-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지방창생)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다.³⁾
 -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정책집 및 의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 그리고 중의원 선거를 위한 자민당 정책 공약집을 통해 ‘지킨다(守る)’를 핵심어로 하는 중점정책 및 기본방침의 방향을 밝힘(표 2 참고).
 - 총재선거 정책집 및 소신 표명 연설에서 5가지(규정, 일본, 국민, 지방, 청년·여성의 기회)를 ‘지킨다’고 약속하고, 자민당 정책 공약집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5가지(규정, 민생, 국가와 국민, 미래, 지방)를 ‘지킨다’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를 추가한 6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특히 일본, 국민, 지방, 민생 등의 ‘지킨다’ 부분에 주요 경제정책이 산재해 포함되어 있음.
 - 이시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실현’,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⁴⁾

나. 거시정책

- [재정]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하에서 경제·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재정재건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됨.⁵⁾ 연말에 발표될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서 재정건전화 노선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언급 수위에 주목하고 있음.⁶⁾
 - 일본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을 넘을 경우, 오히려 소득세 부담률이 하락하는 ‘1억 엔의 벽’ 문제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이자, 배당, 주가 차익 등의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현재 20%) 강화를 언급하였음.
 - 하지만 ‘중산층의 투자 장려라는 최근 정책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시바 총리는 ‘부유층에 대한 부담 요구’로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내용을 완화했으며, 10월 4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음.⁷⁾

3) 星野 卓也(2024), 「石破新政権の経済政策はどうなるか?~岸田首相の「経済成長>財政規律」を一旦踏襲、法人税増税には現実味~」, p. 1.

4) 熊野 英生(2024), 「石破 茂: 新総裁の経済政策の予想~アベノミクスからの軌道修正~」; 木内 登英(2024), 「金融市場の「石破ショック」は一時的: 石破新総裁は経済政策で岸田路線継承を表明」,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4/fis/kiuchi/0930>(검색일: 2024. 10. 17.); 酒井 才介(2024), 「石破新総裁誕生と今後の政策課題-デフレ脱却より生産性上昇に向けた成長戦略が重要-」.

5) 菅野 雅明(2024), 「厳しい船出となった石破政権の行方-総選挙結果次第ながら、政権長期化の可能性も-」, p. 3.

6) 星野 卓也(2024), 「石破新政権の経済政策はどうなるか?~岸田首相の「経済成長>財政規律」を一旦踏襲、法人税増税には現実味~」, p. 4.

7) 조세정책 전문가인 오카(岡) 도쿄재단 주임연구원은 ‘금융소득과세의 강화는 증세가 아닌 고액 소득자(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왜곡 시정 및 소득세 과세의 본래 기능 회복(재원조달 기능의 효율화 제고)’이라는 입장으로,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글로벌 논의(2024년 7월 G20에서의 부유층 과세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와 환경 변화를 감안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岡 直樹(2024), 「いまさら聞けない金融所得課税(1億円の壁)」,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571>(검색일: 2024. 10. 21.).

■ [금융/통화] 재정 규율의 회복, 고물가 압력을 높이는 엔저 억제 등의 관점에서 금융완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일본은행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임.⁸⁾

-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일본은행의 독립성 존중, 금융정책 정상화 지지 등의 입장이었지만, 총재 선거 후 엔화 강세, 주가 급락 등의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10월 2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담 후에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함.
- 이시바 총리의 기존 입장과 다른 발언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관측이 후퇴하여 엔화 약세가 재차 진행됨.⁹⁾

■ [지방]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적인 정책은 ‘지방창생(지방경제 활성화)’¹⁰⁾ 분야이며,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로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것은 도쿄 등 대도시로의 기능 집중 시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함.¹¹⁾

- 과거 지방창생 정책이 선심성의 보조금 지급에 치우쳐 산업정책적 관점이 약했으나, 이시바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창생 2.0’은 전체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관광진흥, 농산물 수출 증대 등)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¹²⁾

표 2.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

| 총재선거 정책집 및 소신 표명 연설(5대 목표) | 자민당 정책공약집(6대 목표) |
|--|---|
| 1. ‘규정을 지킨다’: 당내 개혁, 정치개혁 2. ‘일본을 지킨다’: 외교·안보, 인구감소대책(저출산대책), 경제 재정(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등’,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 ‘재정 및 행정 개혁’ 2. ‘국민을 지킨다’: 실질임금 생산성 향상, 사회보장제도 개혁·치안 확보, 방재성(청) 창설, 사전 재해방지 철저 3. ‘지방을 지킨다’: 지방창생 2.0, 식량안보 4. ‘청년·여성의 기회를 지킨다’: 교육개혁, 여성 활약 참여 | 1. ‘규정을 지킨다’: 정치제도 개혁, 당 개혁 2. ‘민생을 지킨다’: 고물가대책·소득 확대, 사회보장, 성장전략, 경제안보, 탈탄소·에너지, 디지털, 과학기술, 중소기업, 금융, 재정운영, 여성 활약 3.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 외교, 안보,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強靱)화, 재해부흥, 생활안전 4. ‘미래를 지킨다’: 어린이·육아, 교육, 문화·스포츠 5. ‘지방을 지킨다’: 지방창생, 농림수산업 6.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 헌법개정, 행정개혁 |
| 주요 경제정책 방향 | |

| | |
|---------|--|
| 경제정책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실현. ‘임금 인상(소비)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 ·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의 전환’(공급망 정비, 민간·국가 투자 강화)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대응(안전을 전제로 한 원자력 발전 이용·활용, 일본의 잠재력이 높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부문 강화 등) ·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 강화(AI 연구개발·상용화가 손쉬운 ‘세계 제일의 AI 친화적인 일본’ 추진, 핵융합 에너지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개정,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통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허브’ 실현 등) - 당면 대응과제인 ‘고물가 극복’,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국민의 안심·안전’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경제대책 수립을 내각에 지시 |
|---------|--|

8) 木内登英(2024), 「石破新政権の人事案：刷新感よりも安定感重視か：経済政策は岸田路線継承とアベノミクス脱却のパッケージ」,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4/fis/kiuchi/0930_2\(검색일: 2024. 10. 17.\)](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4/fis/kiuchi/0930_2(검색일: 2024. 10. 17.)).

9) 菅野雅明(2024), 「厳しい船出となった石破政権の行方－総選挙結果次第ながら、政権長期化の可能性も－」, p. 3.

10) 이시바 총리는 2014년 9월부터 2년간 초대 지방창생·국가전략특구담당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다수의 일본 언론 및 이코노미스트는 지방경제에 대한 총리의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11) 石川智久(2024), 「(コメント)石破自民党新総裁の公約をどうみるか～経済政策を中心に～」, [https://www.jri.co.jp/page.jsp?id=108822\(검색일: 2024. 10. 17.\)](https://www.jri.co.jp/page.jsp?id=108822(검색일: 2024. 10. 17.)).

12) 石川智久(2024), 「石破政権の地方創生策をどう見るか－産業競争力強化の観点から具体化を急ぐ必要－」, p. 4.

| 총재선거 정책집 및 소신 표명 연설(5대 목표) | 자민당 정책공약집(6대 목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가격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등에 대한 긴급대책 강구, 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정비(보육·간병·보수 등 공적제도 포함), 인력부족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화(DX)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가격전가 대책 강화를 위한 하청법 개정안의 차기 국회 제출 등 · 실질임금·생산성 향상(‘일하는 방식 개혁’과 ‘소득 향상’의 양립 추진, 개인의 재교육(reskilling) 및 기업의 디지털 환경정비 지원을 통한 디지털·로봇·AI 활용 제고와 생산성 향상 도모, 정년제에서 더 나아가 ‘에이지 프리(age free)’ 사회 실현, 겸업·부업 등 다양한 근로방식 실현, 최저임금 1,500엔(전국 평균 시급)으로의 인상 시기를 203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로 조기에 실현 등) · 사회보장제도 개혁(고령자·여성·장애인·외국인의 취업 촉진을 통한 ‘1억 총 참가 사회’를 목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DX 추진, ‘수당보다는 무상화’로 육아 지원 방향을 재검토, 어린이·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지원에도 중점을 둔 저출산 대책 확충 등) · 경제활동의 기반인 금융자본 시장의 변혁을 위해 ‘자산운용입국’ 정책의 계승 및 ‘투자 대국’ 정책 강구 - 내각관방에 경제·금융·시장 등의 위기대응 조직(경제·금융·시장 등 전략본부[가칭]) 설치 - 2026년도까지 ‘방재청’ 신설, ‘방재성’으로의 승격 검토 |
| 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정’의 관점에 입각한 경제·재정 운영,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실현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탄력적인 법인세 체계 구축,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정 -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재정지출 재검토를 통해 현명한 지출(wise spending) 도모 * 총리 취임 전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언급했으나, 의회 연설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 금융/통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연설 등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음.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에 기반한 아베노믹스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지 *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전망을 고려해 중립금리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해 갈 것으로 전망 |
| 지방창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경제의 기폭제’,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 등 강조, 지방창생 교부금을 당초 예산 기준으로 2배 확대,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 본부’ 신설 및 기본구상(10개년 계획) 수립 - 방일 관광객의 지방 분산,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역 조성 추진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5조 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산지·사업자 육성, 전략적 공금망 구축, 신시장 개척을 위한 품목단체, 수출지원 플랫폼 대응 강화, 식품산업의 해외전개 지원 등 추진 |

자료: 石破茂-総裁選特設サイト, 「日本の未来を守り抜く。2024年 自民党総裁選挙 石破茂 政策集」, https://ishiba2024.jp/contents/wp-content/uploads/2024/09/20240910_ishiba_policy.pdf(검색일: 2024. 10. 15.); 「石破首相所信表明演説の全文」, 『日本経済新聞』(2024. 10. 5.); 自民党, 「令和6年 政権公約 日本を守る。成長を力に」.

■ 중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순차적으로 주요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¹³⁾

- 우선 노토(能登) 지방의 지진과 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예비비를 추가 조치한 다음, 이른 시일 내에 ‘고물가 극복’,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국민의 안심·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추경예산 편성 포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¹⁴⁾
- 일본정부는 매년 6월에 「경제·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있는바, 이시바 내각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25년 6월 시점에 이시바 내각의 정책 색깔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13) 自民党, 「日本創生」総選挙 3つの論点,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09261.html?_ga=2.251179200.791458426.1729073355-1017771917.1729073355(검색일: 2024. 10. 18.).

14) 木内登英(2024), 「石破首相の所信表明演説: デフレ脱却最優先と金融政策」,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4/fis/kiuchi/1004_2(검색일: 2024. 10. 18.).

다. 고물가 대책

■ 이시바 내각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지원 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시바 내각의 고물가 대응정책은 ① 에너지 가격 대응(전기, 가스요금, 연료비 급등 대책), ② 저소득층 지원(급부금 지급), ③ 중점지원지방교부금(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 ④ 임금 인상(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구조적 대응(에너지 절약 등)과 같이 크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완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보전(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정책도 포함함(표 3 참고).¹⁵⁾
-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고물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2 참고). 이에 기시다 전 내각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감세정책 등을 실시하고, 기업이 물가 상승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 보조금 등] 일본정부는 2022~23년 2년간 총 3회의 종합경제대책¹⁶⁾을 수립하고 ① 전기·가스·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사업자 보조금 지원 등), ② 정액 감세(소득세 3만 엔+주민세 1만 엔), ③ 저소득층 세대 급부금 지급(세대당 급부금 7만 엔 추가 지급) 등을 실시함.
 - [임금 인상] ① 가격전가*를 실시하는 기업 지원, ②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확충, ③ 의료·간병·복지 분야 처우 개선, ④ 재계에 임금 인상 독려, 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함.¹⁷⁾
- *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노무비 등의 상승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것
- ** ① 임금 인상 촉진세제¹⁸⁾ 조치기간 연장(2년→3년), ② 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예, 중소기업의 경우 3% 임금 인상 시 해당 금액의 10% 소득공제 등), ③ 이월공제제도 도입(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시 5년간 이월공제 혜택 적용)
-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 가운데 “당면한 대응으로서 특히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세대를 지탱하기 위한 급부금 지원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때, 이시바 내각 초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세대 지원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물가대책), 중견·중소 기업의 임금 인상 지원 등이 포함된 경제대책 책정을 지시한 바 있음.¹⁹⁾
- 최근 일본경제는 실질임금의 마이너스(물가상승²⁰⁾이 명목임금 상승을 상회하는 상황 지속,²¹⁾ 노동력(일손 부족²²⁾에 직면해 있는바, 이시바 내각은 일본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물가 대책과 같은 단기 경제대책뿐만

15) 自民党令和6年政策公約 및 「総合政策集2024」-ファイル, 自由民主党.

16) 内閣府(2022. 4. 26.), 「コロナ禍における「原油価格・物価高騰等総合緊急対策」; 内閣府(2022. 10. 28.), 「物価高克服 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및 内閣府(2024. 11. 2.),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17) 首相官邸, 「物価高を上回る所得増へ」, <https://www.kantei.go.jp/jp/headline/chinage/index.html>(검색일: 2024. 10. 24.).

18) 임금 인상 촉진세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년도보다 급여 등 지급액을 늘릴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19) 「石破首相 新たな経済対策指示 衆院選後に補正予算案提出へ」(2024. 10. 4.), 『NHK NEWS WEB』.

20) 일본 국민은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물가수준에 대해 2024년 9월 기준 평균 14.5%(중앙값 10.0%, 3월 및 6월 조사결과와 동일) 상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은 통계상의 수치(최근 7~9월의 근원CPI는 각각 2.7%, 2.8%, 2.5%를 기록)를 크게 상회함. 日本銀行(2024), 「「生活意識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第99回<2024年9月調査>)の結果」, p. 12.

21) 실질임금은 최근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24년 6~7월 상여금 지급효과로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8월에는 재차 마이너스를 기록함.

22) 일본에서는 구인이 구직을 상회하는 일손 부족 현상(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이 2014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음. 일본은 노동투입량(일손×노동시간)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대책의 추진이 긴요한 상황임.

- 이번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 입헌민주당 등의 여야 모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지원 등 고물가 대책을 선거공약집에 포함하며, 저소득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물가대책(단기 경제대책)이 신속히 수립·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 관점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긴요하며, 정책 대응 분야로서는 재교육(reskilling), 노동이동 원활화 등의 노동시장 개혁, 지방창생 등의 성장전략 구체화, 구조개혁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됨.²³⁾

표 3. 이시바 내각의 고물가 관련 정책

| 분야 | 주요 정책 |
|-------------|---|
| 에너지가격 변화 대응 | · [정책] 전기, 가스요금, 연료비 급등 대책을 실시 - 전기·가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 가계소득 보전 등 | ·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의 의료·간병·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등 처우개선 실시, 건설업·운수업 종사자의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기업 지원(임금 인상 촉진제도) · [지원금] 저소득층 대상 급부금(지원금), 급식비 등 보호자 부담 경감, 중점지원지방교부금 확충 등 |
| 사회구조 변화 | · [에너지 전환] 가정·주택의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강한 사회 실현 추진 · [부가가치 창출] 노무비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가격 전가 촉진, 설비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등 |

자료: 일본 자민당 정부조사회 종합정책집 및 중의원 선거 자민당 공약집.

그림 2.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21~)

(단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자료: 総務省 統計局(검색일: 2024. 10. 24.).

라. 지방경제 활성화

■ 이시바 총리는 '지방 활성화(地方創生)'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으며, 이 분야는 지방 발전 및 식량안전 보장의 양대 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이시바 내각은 '지방창생'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를 신설하고,²⁴⁾ 지방과 도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경제 발전, 지방 전통산업 및 내·외국인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지방경제 발전] 도시와 지방 간 정보격차를 없애고, 지방에서 원격교육과 의료 등을 담당할 지방인재를 육성하며,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 및 관광] 문화도시 실현 및 지방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연환경,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등의 전통 산업과 지역특산물 등의 콘텐츠 발전을 포함한 관광산업 발전,²⁵⁾ 블록체인, NFT 기술을 활용한 먹거리와 관광 체험, 그린투어(Green Tourism), 워케이션(Work vaCation) 제도 확충, 오사카 엑스포(大阪万国博覧会) 개최 등을 통해 지방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측면에서 노동력(일손) 부족뿐만 아니라 총노동시간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감소의 본격화, 일하는 방식 개혁(연차유급휴가 취득률 상승, 산업시간의 상한 규제 실시) 등 노동 공급 측면의 요인이 영향을 미침. 矢吹彩(2024), 「労働供給制約の影響が顕在化している日本経済」, pp. 2~4, p. 7.

23) 木内 登英, 「衆院選公示: 自民党の選挙公約と問われる石破カラー」,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4/fis/kiuchi/1015> (검색일: 2024. 10. 25.)

24) 石川 智久, 「石破政権の地方創生策をどう見るか」, <https://www.jri.co.jp/page.jsp?id=108846> (검색일: 2024. 10. 25.).

25) 国土交通省官庁サイト, 「宿泊旅行統計調査」, <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751245.pdf> (검색일: 2024. 10. 25.).

-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초대 ‘지방창생’ 담당대신을 역임한 이시바 총리는 재임 기간에 문화청(文化庁)을 교토로 이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²⁶⁾
- 식량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업의 수출 확대, 농업입지가 열악한 곳에서도 생산활동이 가능한 환경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활용 촉진법」 및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한 농림수산업의 수익 향상 실현 등을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를 달성할 계획임.
 - [농수산물 수출 증대] 2030년까지 지자체의 농수산물 수출액 5조 엔 달성, 쌀의 국내 소비 및 수출 확대, 자급률과 자급력의 수치 목표하에 식료품 수출 확대 및 자급률 상승 도모 등을 통해 식량안보에 공헌함.
 - [스마트 농림수산업 실현]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을 토대로 산관학의 제휴를 통한 스마트 기술 개발, 신제품 및 다수확 품종 개발,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국내 생산 강화, 축산업 관련 사료의 국산화, 수산업 관련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초기 5년간을 농업 구조전환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림수산업의 수익향상을 통한 소득 증가를 도모함.
- 이시바 내각의 ‘지방창생’ 관련 정책 책임자들은 지방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향후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²⁷⁾²⁸⁾
 - 이토 지방창생 담당대신은 “앞으로 10년간 ‘지방창생’의 규모와 이념, 사업목적은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방 발전은 이시바 내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내각부의 지역발전추진 사무국 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카자와 경제재생 담당대신은 “지방발전 추진 교부금을 전년도 예산 대비 2배 높은 2,000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경제 발전 및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함.

표 4. 지방 활성화(地方創生 2.0) 관련 주요 정책 내용

| | 지방 활성화(地方創生) | 식량안전 보장(食料安全保障) |
|-------|---|--|
| 주요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경제·생활환경발전본부 설립 및 향후 10년간 종합대책 검토·실시 - 문화도시 실현 및 지방에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연환경,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등 전통 산업과 지역특산물 등의 콘텐츠 발전, 내·외 국민의 관광산업 발전, 블록체인, NFT 기술을 활용한 먹거리와 관광 체험, 그랜투어, 워케이션 제도 확충, 오사카 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 -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및 방재성(防災省)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 초기 5년간을 농업 구조 전환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 농림수산업의 수익향상 등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 -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 목표 설정(2030년까지 5조 엔), 식료품 수출 확대 및 자급률 상승 등을 통해 식료품 안보에 공헌 - 「스마트농업 기술활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내 생산 강화, 축산 사료 국산화, 수산업 관련 양식업 성장 산업화 등을 추진 |

주: *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사업 승계, 스타트업 등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조정.

자료: 石破茂 総裁選持設サイト, 「日本の未来を守り抜く。2024年 自民党総裁選挙 石破茂 政策集」, https://ishiba2024.jp/contents/wp-content/uploads/2024/09/20240910_ishiba_policy.pdf(검색일: 2024. 10. 25.), p. 4; 「石破首相所信表明演説の全文」(2024. 10. 25.), 『日本経済新聞』; 江田 寛(2024), 「石破政権の地方創生2.0を見通す」, <https://faportal.deloitte.jp/institute/report/articles/001134.html>(검색일: 2024. 10. 25.); 石川 智久(2024), 「石破政権の地方創生策をどう見るか」, <https://www.jri.co.jp/page.jsp?id=108846>(검색일: 2024. 10. 25.); 自民党衆院選2024サイト, 「2024年政権公約」, https://storage2.jimin.jp/pdf/pamphlet/202410_manifest.pdf(검색일: 2024. 10. 25.).

26) 石川 智久, 「石破政権の地方創生策をどう見るか」, <https://www.jri.co.jp/page.jsp?id=108846>(검색일: 2024. 10. 25.).

27) 「地方創生の実現へ新本部設置 年末までに基本的な考えまとめる」(2024. 10. 11.), 『NHK』.

28) 黒瀬浩一, 「石破政権の地方創生は本当に「経済成長の起爆剤」になり得るのか?」, https://www.resona-am.co.jp/oshirase/2024/pdf/241015_m.pdf(검색일: 2024. 10. 25.).

마. 에너지·GX 대책

- 이시바 내각은 디지털 전환(DX)·녹색전환(GX)에 따라 일본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주력하는 한편, 원자력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임.
- [에너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 확보가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안전을 대전제로 한 원전의 활용, △국내 자원의 탐사·실용화,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최적의 전력 구성 실현을 통해 일본경제를 육성할 계획임.²⁹⁾
 - 이시바 총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에 주력한다는 인식을 나타냄.³⁰⁾
 -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최대한 재가동할 방침이며, 원전을 포함한 탈탄소 전력 공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총리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³¹⁾
- [GX] GX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GX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술을 지원하면서 일본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임을 언급함.³²⁾
- [입헌민주당] 입헌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의 2030년 50%→2050년 100%’ 목표를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며, 원전의 활용과 관련하여 원전의 재가동은 용인하지 만 원전 신설·증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표 5. 여야의 에너지 정책 비교

| 구분 | 여당(자민당, 공명당) | 야당(입헌민주당) |
|--------|---|--|
| 재생 에너지 | -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 - 원자력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력을 최대한 활용 - [공명당] 탈탄소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시 | - 재생에너지 전력 구성을 2030년 50%→2050년 100%로 확대 |
| 원자력 | - 원전 재가동 - 혁신 경수로, 고온 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건설 - [공명당] 재가동은 용인하되,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목표 | - 재가동은 용인하되, 원전 신설·증설은 반대 |
| GX 정책 | -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150조 엔 이상의 민관 투자 실현 | - 2030년까지 50조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분야에 200조 엔 규모의 투자 실현 - 카본프라이싱·탄소세 전략 재검토 |

자료: 日本經濟新聞(2024. 10. 20.), 「データでみる衆院選公約・エネ政策、原発推進で隔たり: 電力の原発比率5.5%」.

- [에너지] 현재 일본정부는 2024년 말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책정을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6% 온실가스 감축안’을 고려해 2040년의 전력 구성을 수립할 방침임.

29) 「データでみる衆院選公約・エネ政策、原発推進で隔たり: 電力の原発比率5.5%」(2024. 10. 20.), 『日本經濟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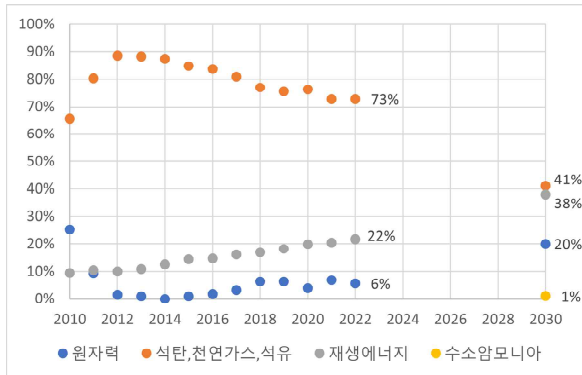
30) 「石破首相「原発比率の低減ありうる」 単独インタビュー」(2024. 10. 12.), 『日本經濟新聞』.

31) 「石破政権の経済閣僚「原発・DX推進を」 岸田路線踏襲」(2024. 10. 2.), 『日本經濟新聞』.

32) 「石破内閣発足、岸田路線継承 経済好循環構築へ」(2024. 10. 1.), 『日刊工業新聞』.

- 2040년 전력 구성 논의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활용이 핵심 쟁점으로, 이시바 내각은 원자력 발전의 활용은 부정하지 않지만,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원전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음.³³⁾
 -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해도 현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동할 수 없는 원전도 존재하는 등 원전 재가동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방침을 명기할 것을 제안함.³⁴⁾
-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021년 책정)에서는 ‘2013년 대비 2030년 46%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화력 41%, 재생에너지 36~38%, 원자력 20~22%, 수소·암모니아 1%’라는 2030년 전력 구성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2022년 기준 전력 구성은 화력 72.8%, 재생에너지 21.7%, 원자력 5.5%로 여전히 화력의 비중이 높음.
 -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일본의 목표 에너지 자급률은 30% 수준이지만, 실제 에너지 자급률은 2010년 20.2%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요인으로 2022년 12.6%로 급락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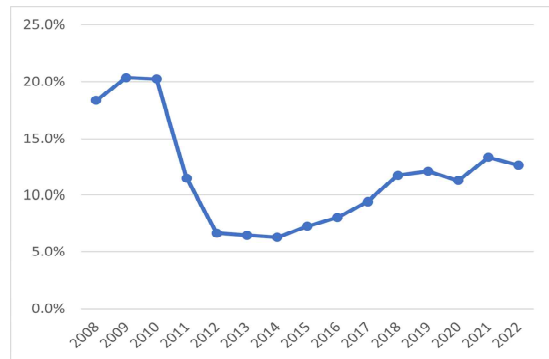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전력 구성 현황 및 2030년도 목표



주: 전력 구성이란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의 종류로 분류한 발전 설비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総合エネルギー統計(검색일: 2024. 10. 25.).

그림 4.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자료: 総合エネルギー統計(검색일: 2024. 10. 25.).

■ [GX] 이시바 내각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녹색전환(GX)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방침임.

- 일본정부는 2040년을 시점으로 탈탄소화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새로운 국가전략 ‘GX 2040 비전’을 준비 중인바, 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력 수요 급증 전망에 대비해 ‘GX 2040 비전’에서는 △에너지·GX 산업 입지, △GX 산업구조, △GX 시장 창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음.³⁵⁾
- 전임 기시다 내각의 GX 정책은 안전성을 대전제로 △탈탄소, △에너지 안정적 공급,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제조업의 구조 전환,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를 비롯해 크게 14개 분야를 강조한 바 있음.³⁶⁾

33) 日刊工業新聞(2024. 10. 1.), 「石破内閣発足 岸田路線継承 経済好循環構築へ」.

34)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24), 「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見直しに向けた提言」.

35) 환경성(2024), 「GX2040ビジョンに向けた環境省の取組」, GX実行会議第12回.

36) 이보람, 손원주(2023),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6, No. 33.

- 기시다 내각은 GX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GX 실행회의’ 설치, 탈탄소 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 천명, GX 경제이행채 발행 및 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 도입, GX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탈탄소 규칙 정비 논의를 주도하고자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및 ‘양국 간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수소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바. 이노베이션 및 스타트업 지원

- 이노베이션 및 스타트업 지원 분야는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이노베이션의 원천인 연구력 향상, 핵융합 에너지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개정,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 추진 등의 중요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시바 내각은 일본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우주 등 프런티어 분야의 개척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지원정책 분야는 이시바 총재선거 정책집과 소신 표명 연설에 그 내용이 제시됨.³⁷⁾
 -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충실한 추진(‘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허브’ 실현), 기술 진화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과 필요 최소한의 법적 틀하에서 AI 연구개발·상용화가 용이한 환경 조성(‘세계 제일의 AI 친화적인 일본’ 견지), 정부의 AI 정책 사령탑 기능 강화, 핵융합 발전의 조기 실현·산업화를 목표로 전략·법 정비·예산·인재육성·스타트업 지원·우방국과의 제휴 등 강화,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연구 기반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개발거점 정비, 신관학 제휴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함.
- 기시다 내각이 2022년 11월에 수립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은 ① 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네트워크 구축, ②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③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하며, 스타트업 투자액을 5년간 10배, 10조 엔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³⁸⁾
 - ①번은 주로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대학에서의 교육기회 제공과 해외 파견을 통한 창업 마인드 양성, 기업 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②번은 정부에 의한 출자 가능 강화를 중심으로 스톡옵션 및 주식투자제도 정비(스타트업 투자 확대 도모), IPO 프로세스 검토(출구전략 다양화), 스타트업에 대한 용자 촉진과 사회적 기업인 지원 등 광범위한 대응을 망라, ③번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검토, 대기업의 노동이동 원활화와 스피노프(spin-off) 촉진 등이 포함됨.³⁹⁾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지 약 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체제 정비, 스톡옵션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정, 스타트업 공공조달 촉진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주요 성과로는 경제산업성 내 담당부서 확대(2024년 7월 이노베이션 창출 혁신사업 추진과 스타트업 추진실 신설),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확대(2022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엔 계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강화를 위한 세제 개정(2023년

37) 石破茂 総裁選特設サイト, 「日本の未来を守り抜く。2024年 自民党総裁選挙 石破茂 政策集」, https://ishiba2024.jp/contents/wp-content/uploads/2024/09/20240910_ishiba_policy.pdf(검색일: 2024. 10. 15.), p. 4; 「石破首相所信表明演説の全文」(2024. 10. 5.), 『日本経済新聞』.

38) 水ノ上 博一, 「ストックオプションによる人材確保～スタートアップへの人材流動化に向けて～」, <https://www.sompo-ri.co.jp/2023/12/18/10825/>(검색일: 2024. 10. 21.).

39) 高野大地, 「「スタートアップ育成5か年計画」への期待とスタートアップ創出・育成に求められるさらなる支援」, <https://www.jri.co.jp/page.jsp?id=105639>(검색일: 2024. 10. 21.).

및 2024년에 스톡옵션 세제, 이노베이션 거점 세제 등 12개 부문 세제 개정,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촉진 확대(2020년 0.83%, 777억 엔→2022년 1.11%, 1,056억 엔→향후 3% 이상, 3,000억 엔 규모를 목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⁴⁰⁾ 또한 2022년에 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도입한 특정 투자자를 위한 종목 제도(J-Ships: JSDA Shares and Investment trusts for Professionals)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스타트업 M&A 매수기법의 하나인 스윙바이 IPO를 통해 2023년 12월 yutori, 2024년 3월 SORACOM이 각각 도쿄 증권거래소(그로스 시장)에 상장됨.⁴¹⁾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일본의 스타트업 관련 기업 수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스타트업 수: 2021년 16,100개사→2023년 22,000개사로 약 1.5배 증가, 대학 내 스타트업 수: 2021년 3,305개사→2023년 4,288개사로 약 1천개 증가,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수: 2021년 6개사→2024년 8개사).⁴²⁾

- 또한 2024년 6월에 수립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4」⁴³⁾에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재해 대응 등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인식함.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3대 강화방안과 3대 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⁴⁴⁾

- 3대 강화방안: ① 중요 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전략(핵심기술 개발 및 다른 전략 분야와의 기술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국내 산업기반 확립 및 스타트업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 산관학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확보 등 추진), ② 글로벌 관점에서의 제휴 강화(중요 기술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주도·참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과 경제안보정책 간 제휴 강화, 글로벌 관점에서의 리소스 적극 활용 및 전략적인 협력 추진), ③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안심 확보(AI의 이노베이션과 AI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가속, AI의 안전·안심 확보, 국제적인 연계·협조 추진)
- 3대 축: ①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인 추진(중요 분야의 전략적 추진, 경제안보에 관련된 대응 강화, 연구 개발·상용화 추진), ② 지식기반(연구력)과 인재 육성 강화(대학펀드 조성 및 지역 핵심대학 지원, 연구시설 강화 및 오픈 사이언스 추진, 인재 육성 및 교육 내실화), ③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도시·지역·대학 등의 연계, 인력·기술·자금의 선순환 촉진)

- 10월 1일, 이시바 내각에서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 및 과학기술정책 대신이 새로 임명됨. 이들은 취임 연설에서 일본의 연구력 강화, 핵융합 발전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개정 및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 추진 등을 강조한바,⁴⁵⁾ 향후 이 부문의 정책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의 연구력 저하(예, 논문발표 지표의 상대적 저조)가 우려되므로, 이 노베이션의 원천인 연구력 향상을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는 소견을 발표함.

40) 經濟産業省(2024), 「「スタートアップ育成5か年計画」の進捗状況について」, p. 1, p. 25; 經濟産業省(2024), 「スタートアップ育成に向けた政府の取組-スタートアップの力で社会課題解決と経済成長を加速する」, p. 5, pp. 12~17.

41) 스윙바이 IPO는 스타트업이 M&A 등을 거쳐 대기업 산하로 편입된 후 사업을 성장시킨 뒤 상장(IPO)하는 것을 의미함. 의류 D2C(Direct to Customer) 업체인 yutori는 ZOZO, IoT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SORACOM은 KDDI의 산하에 들어가, 사업 개발을 진행한 후에 IPO를 실현함. 일본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스윙바이 IPO의 실현 사례가 확인되면서 향후 대기업의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野村證券 홈페이지, 「スタートアップ育成, その後」, https://www.nomuraholdings.com/jp/services/zaikai/journal/w_202404_02.html(검색일: 2024. 10. 22.). 또한 도쿄 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Growth Market)에는 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벤처기업이 상장되며, 우리나라의 중소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와 비슷함.

42) 經濟産業省(2024), 「スタートアップ育成に向けた政府の取組-スタートアップの力で社会課題解決と経済成長を加速する」, p. 10.

43) 일본정부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성장전략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2013년부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실시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새롭게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 전략의 최신판이 2024년 6월에 발표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4」로, 「제6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의 4년 차 연례 실행계획의 성격을 띠.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index.html>(검색일: 2024. 10. 22.).

44)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4[概要]」,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2024.html>(검색일: 2024. 10. 22.).

45) 「石破内閣発足, スタートアップ支援を強化」(2024. 10. 11.), 『科学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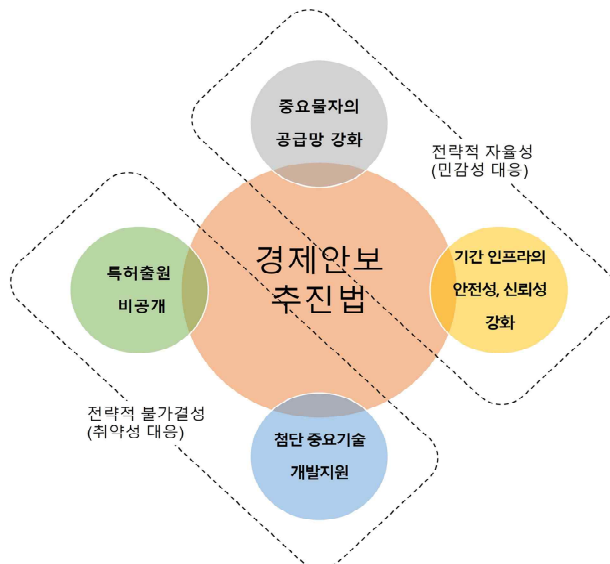
- 기우치 미노루 과학기술정책담당 대신은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4」의 각종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되, 그 중에서도 핵융합 에너지 국가전략 개정, AI 제도의 기본방향 검토 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또한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국제적 허브가 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⁴⁶⁾의 지속 추진도 언급함.

사. 경제안보 대응

■ 이시바 내각의 경제안보 정책 또한 전임 기시다 내각의 관련 정책을 계승·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임 기시다 내각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산업의 중요성 증대 등을 배경으로 2021년 10월 경제안보담당 대신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을 본격화함.
- 이러한 배경하에 2022년 5월 18일 「경제시책의 일체화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이하 경제안보 추진법)」이 제정됨.
- 「경제안보 추진법」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② 기간(基幹) 인프라 역할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③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④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임.⁴⁷⁾

그림 5. 일본 「경제안보 추진법」의 주요 내용



자료: 저자 작성.

46)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사회적 과제 해결 및 국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GSC 구상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쿄 도심에 플래그십이 되는 거점을 창설할 계획이며, 2024년 8월에 이 구상의 기본방향이 발표되었음. 内閣官房, 「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構想」, <https://www.cas.go.jp/jp/seisaku/campus/index.html#initiative>(검색일: 2024. 10. 22.).

47) e-gov 法令検索,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504AC0000000043>(검색일: 2024. 10. 25.).

- 이시바 내각은 이러한 경제안보 정책을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4일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반도체 등의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과 기술유출 대책을 추진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자민당의 중의원 정책 공약집에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다음의 내용이 차별화되어 나타남.
 -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여기에 담긴 취지를 다음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영할 것
 - 기간 인프라 산업(정보통신, 에너지, 의료, 금융, 교통, 운수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와 직결되는 반도체 관련 생산기반의 확충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 첨단기술 수출이나 우회 수출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관리 체제를 검토
 - 경제안보상의 위협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의 ‘정보기능(intelligence)’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전문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민 사이의 전략대화와 더불어 ‘전략인사 교류’ 등을 추진
 -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창설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첨단 중요기술을 강력하게 보호·육성

■ 이시바 내각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담당할 장관급 인사인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 대신은 외무성 관료 출신이자 중의원 6선의 정치인임.

- 2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장관) 정무관, 3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성 副대신(차관), 4차 아베 내각에서 환경성 副대신, 중의원 외무위원장 등을 역임함.
 - 도쿄대 교양학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1989년에 외무성에 들어갔으며, 1990년 주독일 일본대사관에서의 근무(독일어 유창),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에서의 한국 담당(한국어 가능) 경험 등이 있음.
- 10월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안보 추진법」의 착실한 이행 및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활용법」의 운용기준 책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2022년 5월 공포된 「경제안보 추진법」에 근거해서 최근까지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국민의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重要經濟安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일명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활용법)이 성립되어 비밀취급인가 제도 창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 밖에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 산업의 리스크 점검, △투자심사의 실효성 확보, △첨단기술의 수출 관리,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등을 살필 것이라고 언급함.
 - 자민당의 경제안보추진본부에서 9월 10일 정부에 제출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에 관한 제언’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국제협력의 추진이 필요한 동시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힘.

■ 제10야당이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입헌민주당 역시 경제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집을 통해 △공급망의 강화, 첨단기술의 우위성 확보, △인프라 안보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안보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혀 자민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이시바 내각의 경제안보 정책은 야당과의 큰 충돌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3. 전망 및 시사점

가. 일본경제 전망

■ [거시경제] 이시바 내각은 최저임금 인상 등 내수진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기조 지속 등으로 실질임금 상승 및 개인소비 회복은 불투명해 보임.

- 고물가 추이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24. 8. 기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소비 회복세도 더딘 상황임(그림 6 참고).
- 명목임금 상승률이 3%를 초과하고 2024년 임금 인상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회복을 위한 일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입물가 상승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소비를 억제하고 있음.
-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2023년에는 수출기업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미국 대선, 중동 리스크 등) 및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가 불확실함.
-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함으로써 이시바 내각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 재정건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층 지원 등 세출이 예상되는 정책 추진 약속과 증세(금융소득세 확충)에 대한 신중한 입장 등으로 볼 때 이시바 내각에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이시바 내각은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시다 전 내각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기시다 전 내각은 '① 2025년도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②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인하'라는 2018년 아베 전 내각의 재정건전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표명했으나, 고물가 대응 등을 위해 2022~23년 동안 총액 44조 8,223억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9%(23) → 3.0%(24)로 악화될 전망이다(그림 7 참고).⁴⁸⁾⁴⁹⁾
- 이시바 총리가 ① 저소득층 지원 등 추가 세출이 수반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재정적자를

48) 内閣府, 「中長期の経済規模に関する試算」, 연도별 자료,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검색일: 2024. 10. 15.).

49) 해당 수치는 2024년 7월 내각부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것이며, 올해 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대책 및 이에 따른 추경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아 2024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완화할 뚜렷한 정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 보임.

그림 6. 명목임금, 소비자물가, 실질임금 상승률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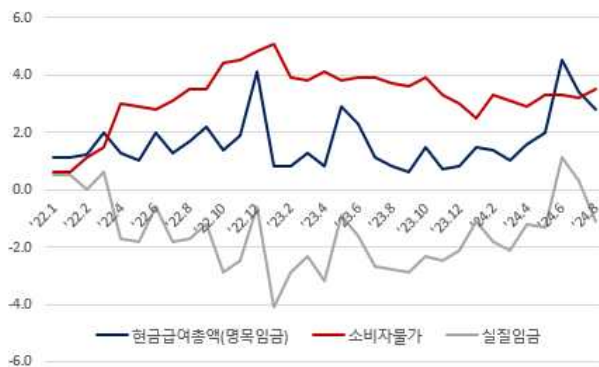


그림 7.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주: 1) 실질임금은 현금급여총액에서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수치임.

2) 총무성은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을, 후생노동성은 전년대비 수치를 사용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주: 1) 2023, 2024년은 추정치임.

2) '연평균 2%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임.

자료: 内閣府(2024).

자료: 厚生労働省, 「毎月勤労調査」.

■ [금융] 일본은행 주요 인사 및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금리인상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행은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무담보콜 익일물)를 0.0~0.1% → 0.25%로 인상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1%로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시장 등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⁵⁰⁾
- o 일례로 2024년 하반기 0.5%로의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대두됨.
- 그러나 우에다(植田) 일본은행 총재가 9월 24일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국경제 등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금리인상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⁵¹⁾
- 이시바 총리도 취임 초기에는 금리인상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후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일본은행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나타냄.

나. 시사점

■ 한일 관계에 대한 이시바 내각의 긍정 요인과 우려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우려 요인을 일정 정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됨.

- 이시바 총리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역사 문제를

50) 日本銀行(2024), 「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ける主な意見 (2024年7月30,31日開催分)」.

51) 「日銀 植田総裁“米経済先行き不確実 利上げ時期慎重に検討”(2024. 9. 24.)」, 『NHK NEWS WEB』.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됨.

- 한일 양국 간에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바 있음.⁵²⁾
- 또한 총리 취임 후 진행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일이 긴밀히 연계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⁵³⁾
- 하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단적자위권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안보 분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불안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함.⁵⁴⁾
- 이시바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⁵⁵⁾
-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이며, 안보 분야에서의 강경한 정책 추진도 야당의 견제로 인해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입헌민주당 등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나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⁵⁶⁾

■ 일본의 국내외 정책 추진에 있어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야당 인사와의 네트워킹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 이후 15년 만의 일이며, 1996년 제41회 중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은 2009년을 제외하고 줄곧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음.
- 이에 따라 일본 내 정치는 자연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영향력(권력)이 형성되어 왔고, 이로 인해 우리가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민당이 우선순위에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중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국내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야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 인사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경제교류와 관련해서도 보다 전략적으로 일본 야당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이 증가한 148석을 확보하여 자민당(191석)과 견줄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민주당(28석)은 정책별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협력하겠다고 하여 캐스팅보터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야당 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해 보임.

52) 「역사인식 '온건파' 이시바 시게루, 日 총리 선출·새 내각 출범(종합)」(2024. 10.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1048551073>(검색일: 2024. 10. 25.).

53) 「石破首相所信表明演説の全文」, 『日本経済新聞』(2024. 10. 5.).

54) 이면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2024의 결과분석과 시사점」(2024. 10. 10.), 『SEJONG FOCUS』, p. 4.

55) 「国防部回应石破茂“亚洲版北约”：停止搞排他性军事同盟和“小圈子”」(2024. 10. 15.), 『北京日报』, <https://baijiahao.baidu.com/s?id=1812967653524632375&wfr=spider&for=pc>(검색일: 2024. 10. 25.).

56) 「【代表会見】石破総理は「ブレない発信を」野田代表」, https://cdp-japan.jp/news/20241004_8326(검색일: 2024. 10. 26.).

- 경제안보에 대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큰 차이가 없어, 현재 일본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집권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에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제안보 정책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충돌과 대립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은 「경제안보 추진법」에 따라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강화,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 등의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과 △기술유출 대책 마련, △사이버 안보를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협력 가능한 경제안보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민당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일본의 여야 간 국제정세 인식 및 중국에 대한 입장 등에 있어서 일정한 간극도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⁵⁷⁾
- 이시바 내각이 일본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지방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한일 지방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시바 내각은 일본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디지털화(DX)와 문화·관광 산업 육성,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농어촌 소득 증대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 또는 강화할 방침임.
- 우리 정부 또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와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약속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23] 지역 자체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지방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한일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⁵⁸⁾
 - △농업의 미래화와 농가 경영 안정,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중앙-지방 정부 사이의 소통 및 협력 강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의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방 균형 발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방면에서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전략산업 등의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며 지역 발전 및 한일 관계 발전 차원에서 양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음.

57) 입헌민주당은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ASEAN+3, EAS, APEC 등 소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QUAD에 한국, 영·프·독, ASEAN 등 국가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미·중 등 대국 사이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어 자민당과 일정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함.

58)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검색일: 2024. 10. 27.).

- 향후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여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정국 변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됨.
- 향후 일본 야당의 정책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과 금융, 에너지, 경제안보 등과 관련한 주요 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현재로서는 녹색전환(GX)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관련 정책의 큰 방향에서 여야가 일치하는 만큼, 일본의 정국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본과 수소 분야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본 주도의 AZEC이나 JCM 등에서도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큰 이견이 부각되지 않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 등 관련 정책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KIEP**